

MB, 끝까지 지역정책 도외시 하나

취임 4주년 기자회견서 혁신도시 등 현안 언급 안해

지난 22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이명박 대통령의 취임 4주년 특별기자회견에서 혁신도시와 기업도시 등 지역현안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어 현 정부가 지역 정책을 도외시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 대통령은 한미FTA, 제주 해군기지 건설을 둘러싼 민주통합당 등 야권의 반대, 내곡동 사자 논란, 친인척·측근비리, 특정 지역·학교에 편중된 인사정책, 교착된 남북문제, 학원폭력

문제 등 국정 전반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또한, 이 대통령은 경국 현안과 관련, 민주통합당 등 야권의 '말바꾸기'에 대해 비판과 함께 3월에 열리는 핵안보정상회의와 최근 중동순방 성과를 설명하는 '제2 중동봉'에 대한 설명에 할애했다.

하지만 지역의 최대 관심사항인 현정부의 지역발전 중심정책인 '5+2 광역경제권' 계획의 구체적인 추진 방향에 대한 설명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또한, 사업 추진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기업도시와 혁신도시 건설 사업에 대해서는 아예 언급조차 되지 않았다.

비수도권 성장거점으로 기대를 모았던 이를 사업의 경우 당초 예정대로라면 올해 사업완료 시점인데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기업유치는 가시화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지역 정관계에서는 이명박 정부에서의 지방 정책이 차지하고

있는 현주소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지적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지방의 어려움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지방을 살리기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지 않아 아쉬웠다"며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살 수 있다"는 점에서 남은 1년 임기동안에 지방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보다 적극적인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김정은 체제 출범후 첫 북미대화

베이징서 고위급 회담

북한의 김정은 체제 출범 이후 첫 북미대화가 23일 베이징에서 열렸다.

김재관 외무성 제1부상을 단장으로 하는 북한 대표단은 이날 오전 10시(이하 현지시간) 주중 북한대사관에서 글린 데이비스 국무부 북미정책 특별대표가 이끄는 미국 대표단과 만나 제3차 고위급 회담을 시작했다.

이번 북미대화는 지난해 10월28일부터 이틀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제2차 고위급 회담이 열린 이후 4개월 만이다.

데이비스 특별대표는 회담장으로 향하기에 앞서 현지 솔루션 웨스틴호텔에서 취재진과 만나 "오늘은 '개입데이'"라고 밝혀 이번 회담의 핵심의 제인 북한의 비핵화 사전조치와 대북 식량지원을 놓고 광활한 줄다리기가 있을 것임을 예고했다.

김 제1부상은 입국 직후 공항에서 "이번 대화에 어떤 기대를 하고 있느

나"는 질문에 "우리는 기다릴 것"이라고 짧게 답했다.

미측은 이번 회담에서 우라늄농축 프로그램(UEP) 중단과 함께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단 복귀, 대량살상무기(WMD) 실험 모라토리엄 선언 등의 비핵화 사전조치를 북측에 요구할 방침이다.

북측은 30만 규모의 곡물지원과 대북제재 해제 등을 요구하면서 미측으로부터 최대한 양보를 끌어내겠다는 전략인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이대통령 야당 비판은 총선 개입"

민주 "MB 총체적 실패에 박근혜도 방조" 정치쟁점화

민주통합당이 이명박 대통령의 취임 4주년 특별기자회견을 선거개입으로 규정, 정치쟁점화를 시도하고 나섰다.

여권의 '야당 말 바꾸기' 공격 국면을 벗어나기 위해 다른 쟁점을 만들 어내는 학원관련사를 사전에 차단 하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한명숙 대표는 23일 오전 서울 63빌딩에서 열린 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서 "총선이 50여 일 남았는데 선거를 앞두고 가장 중립을 지켜야 할 대통령이 새누리당 정책을 응호하고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등 민주당 정책을 비판하는 것은 정치 개입, 선거 개입"이라며 "있을 수 없는 일로 입장

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우리 역사상 대한민국 대통령이 야당 대표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옛 정권 인사들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집중적으로 비판하고 선전포고하는 일은 없었다"며 "인신공격하는 식으로 선거전략을 세우는 건 옳지 않으며 품격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이 전날 회견에서 제주해군기지 건설 논란과 관련해 참여정부 핵심관료를 지낸 한 대표와 이해찬 전 국무총리, 통합진보당 유시민 공동대표의 발언내용을 소개하며 '말바꾸기' 행태를 비판한 것에 대한 반박으로 해석된다.

이에 앞서 김진표 원내대표는 고위정책회의에서 "남은 임기 동안 총선, 대선을 공정히 관리해야 할 대통령이 예의와 염치없이 제1야당 지도자의 말꼬리나 뒤자며 칠판한 행태를 보였다"고 맹비난했다.

이용섭 정책위의장도 "일국의 대통령 기자회견으로 보기 어려울 정도였고 품격도 없고 정쟁만 부추겼을 뿐 아니라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명백한 선거개입"이라며 "말 바꾸기에 관한 한 현재 활동하고 있는 정치지도자 중에서 이명박 대통령을 따라온 정치인은 아무도 없다. 이는 그야말로 제 눈의 들보는 보자 못하고 남의 눈의 티만 보는 격이다"고 비판

했다.

그는 이어 ▲세종시 행정부처 이전 백지화 ▲호남고속철도 완공을 2012년에서 2017년으로 연기 ▲동남권 신공항 백지화 ▲광주에 상품거래소 설치 약속 파기 등 10대 말 바꾸기 사례를 공개했다.

민주당은 또 새누리당 박근혜 비상대책위원회에 대해서도 공격의 고삐를 당겼다. 박 비대위원장이 제기한 '아관심관론'에 대해 이명박정부의 실정을 부각하는 '정관심관론'과 박비대위원장의 '방조론'을 동시에 제기하고 나선 것이다.

한 대표는 이날 토론회에서 "새누리당은 이명박정부의 총체적인 실정과 권력형비리 때문에 심판론에 대한 공포감이 있다"며 "총체적 실패에는 박 비대위원장도 방조하고 동참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난폭운전을 하는데 조수석에서 방관한 것도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에 공동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MB 측근비리 의혹 특검 사안"

새누리당 이상돈 비대위원장 밝혀

같다"고 말했다.

그는 내곡동 사자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범죄가 사실상 저질러진 형국"이라며 "최소한 (이 대통령의 아들인) 이시영씨와 경호쪽 관계자에 대해서는 기소가 불가피하지 않는のが 생각된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이 연설에서 4대강 사업을 언급하지 않은데 대해서는 "굉장히 의외였다"며 더 큰 논란을 막기 위해서였을 것으로 추론했다.

그는 이어 "한나라당 지도부가 붕괴, 비대위 체제로 들어갔는데

일연반구 언급이 없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현재 정국상황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표출한 것이라고 봐야 된다"고 말했다.

박근혜 비대위원장이 현 정부 실정의 공동책임자라는 일부 비판론에 대해 그는 '부정부패, 각종 의혹, 몇몇 정책실패 등은 박 위원장에게는 크게 책임질 부분이 없는 것들'이라며 "사실상 책임있는 사람이 책임지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응급의료기관 관리자 간담회

응급의료체계 활성화를 위한 응급의료기관 관리자 간담회가 23일 오후 광주시청 소회의실에서 광주시 소방본부와 지역응급의료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1부는 23일 부산지검은행그룹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서갑원(50) 전 민주당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유일한 직접증거인 김양(60) 부산지검은행 부회장의 진술을 뒷받침하는 객관적 자료나 진술이 없고, 서 전 의원이 공소사실에 적시된 범행 당시에 범행 장소가 아닌 다른 곳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유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서 전 의원은 2008년 10월4일 김부회장의 전화를 받고 곤성의 한식당 앞도로에서 직접 만나 3000만원을 건네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탈북자에 '한국민증명서' 발급 검토

서감원 전 의원 무죄

국회 대표단 중 파견 추진

정부와 새누리당은 23일 중국 양류 탈북자들의 강제 북송위기와 관련, 탈북자들에 대한 '한국민증명서' 발급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회의에서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고 이주영 정책위의장이 밝혔다.

이 정책위의장은 브리핑에서 "한국민증명서를 발급해 주면 중국 공안이 석방할 수 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발급해줘야 하지 않느냐는 얘기가 있었다"면서 "회의에서 의원들이 한국회부의장과 김형오 전 국회의장, 민주통합당 이나연 의원, 선진당 심대평 대표와 이희창 전 대표 등 29명이 서명했다.

당정은 이와 함께 ▲국회 외교통상 통일위원회 차원의 '탈북자 북송저지 결의안' 채택 ▲국회 대표단 중국 파견 ▲중국 홍십자(우리나라 적십자)에 탈북자 인도적 처우 요청 등을 추진키로 의견을 모았다.

이날 당정회의에는 정부에서 김성환 외교부장관 등이 참석했다.

한권 자유선진당 박선영 의원은 23일 탈북자들의 북송을 저지하기 위해 '중국의 탈북자 강제 북송 중단 촉구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결의안에는 한나라당 소속인 정의화 국회부의장과 김형오 전 국회의장, 민주통합당 이나연 의원, 선진당 심대평 대표와 이희창 전 대표 등 29명이 서명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3부는 23일 부산지검은행그룹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서갑원(50) 전 민주당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유일한 직접증거인 김양(60) 부산지검은행 부회장의 진술을 뒷받침하는 객관적 자료나 진술이 없고, 서 전 의원이 공소사실에 적시된 범행 당시에 범행 장소가 아닌 다른 곳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유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서 전 의원은 2008년 10월4일 김부회장의 전화를 받고 곤성의 한식당 앞도로에서 직접 만나 3000만원을 건네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서 전 의원은 2008년 10월4일 김부회장의 전화를 받고 곤성의 한식당 앞도로에서 직접 만나 3000만원을 건네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국회 대표단은 23일 중국 양류 탈북자들의 강제 북송위기와 관련, 탈북자들에 대한 '한국민증명서' 발급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회의에서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고 이주영 정책위의장이 밝혔다.

이 정책위의장은 브리핑에서 "한국민증명서를 발급해 주면 중국 공안이 석방할 수 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발급해줘야 하지 않느냐는 얘기가 있었다"면서 "회의에서 의원들이 한

국회부의장과 김형오 전 국회의장, 민주통합당 이나연 의원, 선진당 심대평 대표와 이희창 전 대표 등 29명이 서명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서 전 의원은 2008년 10월4일 김부회장의 전화를 받고 곤성의 한식당 앞도로에서 직접 만나 3000만원을 건네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국회 대표단은 23일 중국 양류 탈북자들의 강제 북송위기와 관련, 탈북자들에 대한 '한국민증명서' 발급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회의에서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고 이주영 정책위의장이 밝혔다.

이 정책위의장은 브리핑에서 "한국민증명서를 발급해 주면 중국 공안이 석방할 수 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발급해줘야 하지 않느냐는 얘기가 있었다"면서 "회의에서 의원들이 한

국회부의장과 김형오 전 국회의장, 민주통합당 이나연 의원, 선진당 심대평 대표와 이희창 전 대표 등 29명이 서명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서 전 의원은 2008년 10월4일 김부회장의 전화를 받고 곤성의 한식당 앞도로에서 직접 만나 3000만원을 건네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국회 대표단은 23일 중국 양류 탈북자들의 강제 북송위기와 관련, 탈북자들에 대한 '한국민증명서' 발급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회의에서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고 이주영 정책위의장이 밝혔다.

이 정책위의장은 브리핑에서 "한국민증명서를 발급해 주면 중국 공안이 석방할 수 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발급해줘야 하지 않느냐는 얘기가 있었다"면서 "회의에서 의원들이 한

국회부의장과 김형오 전 국회의장, 민주통합당 이나연 의원, 선진당 심대평 대표와 이희창 전 대표 등 29명이 서명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서 전 의원은 2008년 10월4일 김부회장의 전화를 받고 곤성의 한식당 앞도로에서 직접 만나 3000만원을 건네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국회 대표단은 23일 중국 양류 탈북자들의 강제 북송위기와 관련, 탈북자들에 대한 '한국민증명서' 발급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회의에서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고 이주영 정책위의장이 밝혔다.

이 정책위의장은 브리핑에서 "한국민증명서를 발급해 주면 중국 공안이 석방할 수 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발급해줘야 하지 않느냐는 얘기가 있었다"면서 "회의에서 의원들이 한

국회부의장과 김형오 전 국회의장, 민주통합당 이나연 의원, 선진당 심대평 대표와 이희창 전 대표 등 29명이 서명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서 전 의원은 2008년 10월4일 김부회장의 전화를 받고 곤성의 한식당 앞도로에서 직접 만나 3000만원을 건네받